

# 500억대 장외주식 사기 피해자들 “우린 어찌나”

### 허위정보로 부당이익 전 필립에셋 회장 숨진 채 발견...공소 기각 가능성 다음달 5일 광주지법 변론 기일 앞두고 피해 보상 사실상 어려워 한숨만

장의 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5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엄익석(54)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가 발견되고,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판이 지연되다 결국 엄씨가 사망해 “피해회복을 받을 길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엄씨의 사무실에서 숨진 엄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무실에선 엄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등의 내용 담겨있지만, 대상이 가족인지 피해자들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엄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장외 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일당 11명과 함께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엄씨는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2019년 5월 법원에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들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 등 허위정보를 퍼뜨려 2~2.5배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가 회장으로 있던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 펀딩, 보험 등 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판매원과 본부장급들에게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되팔았는데, 차액 2180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 17억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다.

엄씨는 필립에셋과는 별도로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업체 ‘블루 에어’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체로 전환하고자 자본금을 늘려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의 항공 노선을 취항했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돼 파산했다.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엄씨는 법인세 등 5건에 걸쳐 104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엄씨가 기자회견을 노리고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자금을 투자했지만 상장폐지가 됨에 따라 세금체납과 투자실패 재구속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엄씨 관련 재판이 피고인, 증인들이 다수인데다가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기소된지 4년이 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자 사건 관련자들이 광주지법을 찾아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은 잇따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풀려난 엄씨가 가상화폐 등을 통한 유사 사업을 이어가면서 또다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구속 재판해달라”고 주장했었다.

엄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5일 광주지방법원에

서 예정된 상황에서 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11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엄씨의 사망 소식에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코인과 부동산 투자로 회복해 갈아주겠다”는 엄씨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엄씨 사망으로 피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밝힌 김모씨는 “곧 피해 회복을 해 줄 것 처럼 말해 대책위 같은 조직을 마련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점마다 직원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점에서 가능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당장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물 절약 벽돌로 가뭄 이겨냅시다”

광주시 북구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통장단이 28일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양변기 수조용 벽돌을 옮기고 있다. 문흥1동 주민자치회가 물을 절약해 가뭄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준비한 벽돌 1만장은 관내 11개 아파트 약 4800세대에 전달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화물연대 총파업 속 광양서 비조합원 폭행 피해 신고

### 경찰 수사 나서...광주선 조합원들 경찰 대응 반발 회견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비조합원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양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광양읍 동순전 톨게이트 원주방향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의 벽살을 잡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비조합원인 A씨는 광양시 울촌산단에 있는 한

업체에 갔다가 집회로 길어막혀 돌아가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A씨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과정에서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1시 광주광산경찰 앞에서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면허정지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경찰의 대응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는 총파업 6일차인 29일 가야자동차 광주공장 남문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주식 전부 소유한 설립자 주식 일부 직원 명의 해줬다 돌려받아도 취득세 면제”

회사 설립자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일부 직원 명의로 해줬다가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합소심에서 광산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선고를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6월 금속도장 제조·판매 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하면서 총 주식 1만주 중 45%(4500주)를 본인의 명의로 했다. 나머지 지분 30%·25%는 직원 B·C씨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올렸다.

2003년 3월 C씨가 퇴사하자 보유 주식 25%를 다른 직원 D씨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B·D씨가 소유한 주식(55%)을 모두 본인 소유로 변경했다.

광산구는 A씨가 회사 주식 절반 이상을 소유(45%→100%)하는 과점 주주가 됐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년 9월 A씨에게 취득세 1억 79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897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과점 주주로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분 비율 증가를 전제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준 직원들이 대금 지급과 배당금 수령 없이 단순히 A씨에게 주주 명의로만 빌려준 점, A씨가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곡성군수·영암군수

###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로 이 군수와 섬겨캠프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남의 한우 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대금은 이 군수 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됐지만, 검찰은 이 군수와 지인 등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우 군수를 기소했다.

우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관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9582 - 7400